

경찰 정당성 인식의 다차원 요인 타당성 연구

정 재 훈*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 론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Tankebe(2013)가 최초로 제시한 경찰 정당성 인식의 4 요인 구조를 국내에서 김소영·엄유진·정재훈(2024)이 3 요인 구조로 수정하여 제안한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 성인 서울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로 구성된 3 요인 모델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병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단일 요인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유의하게 적재되었으며,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가 독립된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규범적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요인을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규범적인 단일 요인 구조로 구성되는 경찰 정당성 인식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가 있으며, 향후 표본의 다양화와 반복 검증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강원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교수

주제어: 정당성,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요인분석

I. 서론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 양상의 복잡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치안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례 없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찰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활동의 전략과 운영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경찰활동, 문제해결 중심의 SMART Policing, 협력적 경찰서비스 등 시민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접근이 강조되면서, 치안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시민의 자발적 협력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범죄신고는 경찰에 대한 협력의 대표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범죄신고는 법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재이자 사법 체계가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Black, 2010; 서한별·황의갑, 2019).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범죄 발생 건수 중 신고, 진정·탄원·투서 등 시민에 의해 제공된 수사단서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5. 7. 8.). 이는 경찰활동의 상당 부분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임에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의 신고 의사를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 탐색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권창국, 2013; 김군태, 2017).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절차적 정의 이론(procedural justice theory)은 시민의 협력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적 틀로 자리매김하였다. Tyler(1990)는 시민이 법집행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경험할수록 해당 기관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되며, 이는 자발적인 법준수와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이 객관적·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의사결정의 질(quality of decision making)과, 시민을 정중하게 대하며 권리를 존중하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처우의 질(quality of treatment)을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이재영·이승현, 2022). 여기에 그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경찰 효과성(police

effectiveness)을 추가하여, 그것이 정당성(police legitimacy)을 매개로 시민들의 법준수와 경찰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Tyler, 2003). 그의 이론과 논의는 후속 학자들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어 서구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이영섭, 2017).

그러나 비서구권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문화적 특성, 제도적 신뢰 수준 등 사회·제도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절차적 정의 이론의 변수 간 관계와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Tankebe, 2009, 2013; Peacock, 2018). 이와 함께 Tankebe(2013)는 비서구권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성 요인으로 합법성(lawfulness),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경찰 효과성으로 구성된 4 요인 모델을 제시하였고, Tankebe, Reisig & Wang(2016)을 비롯한 후속 연구에서도 이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경찰 효과성을 제외한 3 요인으로 구성된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측정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서로 독립적인 3 요인 구조가 도출됨을 의미한다. 실제 김소영·엄유진·정재훈(2024)은 경찰 정당성 인식을 4 요인 모델과 3 요인 모델로 비교 분석한 결과, 범죄 억제와 치안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효과성이라는 도구적 요소는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성 요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경찰 효과성을 제외한 3 요인 모델은 선진국(developed world)에서 경찰활동의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규범적 판단(normative judgments)'이 경찰 효과성이라는 '도구적 관점(instrumental views)'보다 시민의 순응과 협력을 예측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Tyler(1990), Tankebe(2009)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은 비서구권에 속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국가이기도 하다. 즉,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국가의 지리적 위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절차적 정의 이론의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맥락에서 경찰 정당성 인식의 다차원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하여 이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파악하는 일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경찰 정당성 인식의 3 요인 모델이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델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내 경찰활동에서 정당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절차적 정의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은 미국의 Tyler(1990)가 저서 *Why People Obey the Law*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법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시민의 법준수와 협력에 미치는 심리적·인지적 경로를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찰이 법집행 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경우, 시민들은 경찰과 그 법집행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정당성 인식은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Tyler, 2003). 절차적 정의 이론은 형사사법기관, 특히 경찰에 대한 시민의 순응과 협력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틀로 발전하였으며, 법집행의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 정당성 인식을 핵심 요소로 삼는다(라광현, 2018).

이 이론은 크게 서구권 및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Tyler의 절차적 정의 모델과 비서구권 및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Tankebe의 절차적 정의 모델로 구분된다(김소영·엄유진·정재훈, 2024). Tyler 모델은 시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가 경찰 정당성 인식을 매개하여 법준수, 협력 의사, 신뢰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주로 검증하였다(장재성, 2023). 이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도구적 요인이나 강제력보다는 절차적 요건의 준수를 통해 시민의 공감을 얻는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미국 경찰활동의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Tyler의 이론은 이후 다양한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화되면서 서구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이영섭, 2017), 많은 연구자는 그의 주장에 따라 법준수 의무를 경찰 정당성 인식의 핵심 측정 지표로 간주하였다(Liu, 2019). 이처럼 경찰 정당성 인식은 절차적 정의 이론의 핵심 요인으로서 개념화가 이루어졌으며,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한편, 절차적 정의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Tankebe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비서구권 국가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서구권 국가와 상이함을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적 정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정재훈, 2021). Tankebe의 절차적 정의 모델은 아프리카 가나에서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거시적 사회 변수를 절차적 정의 이론에 도입하여 경찰 정당성 인식의 개념화를 확장하였다(이영섭, 2017). 그는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경찰 효과성이 경찰 정당성 인식과 경찰협력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제시하

며, 경찰 정당성 인식의 연구가 경찰활동과 시민 협력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찰 정당성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의 법준수 의무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협력을 끌어낸다고 설명하였다(Tankebe, 2013). 이러한 접근은 미국과 가나를 대상으로 한 Tankebe, Reisig & Wang(2016)의 연구와 중국을 대상으로 한 Sun et al.(2018)의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두 연구는 경찰 정당성 인식이 다차원적 구조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 타당성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검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Tyler의 절차적 정의 모델은 주로 규범적 공정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 정당성 인식을 설명하는 반면, Tankebe의 모델은 여기에 효과성과 같은 도구적 요인을 포함한 다차원적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두 접근은 경찰 정당성 인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와 문화적 맥락에 따른 경찰활동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는 중요한 틀로 기능하고 있다.

2. 경찰 정당성 인식

Beetham(1991)은 Weber의 정당성 개념을 발전시켜, 정당성을 지배할 권리(the right to govern)와 그러한 권리에 대한 지배 대상자의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지배자의 명령은 지배 대상자가 도덕적으로 순응할 수 있을 만큼 정당해야 하며, 지배 대상자가 이를 특정 권력관계에 기초한 합의의 결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권위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정당성은 권한 행사의 적절성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시민이 형사사법기관의 권위와 제도를 정당하다고 인식할 때 권한과 명령에 대한 준수 의지가 형성된다(Tyler, 1990).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권력을 보유·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찰 정당성 인식이 형성되면 시민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 경찰의 결정과 사회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된다(Tyler, 2006). 절차적 정의 이론은 이러한 정당성을 핵심 요인으로 강조하며,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성 요인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Reisig, Bratton & Gertz(2007) 등의 연구에서는 ‘법준수 의무(obligation to obey)’와 ‘경찰 신뢰(trust)’를 중심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Hinsch(2008)는 ‘객관성(objectivity)’과 ‘도덕적 승인(moral approval)’, Jackson et al.(2012)은 ‘명령준수 의사(felt obligation to obey the police)’와 ‘도덕적 일치

감(moral alignment with the police)', Tyler & Jackson(2014)은 '법준수 의지(obligation)', '신임 및 신뢰(trust and confidence)', '도덕적 일치감(moral alignment)'을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성 요인으로 보았다(김소영·엄유진·정재훈, 2024).

또한, Tankebe(2013)는 절차적 정의 이론을 보완하여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체적 다차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합법성(2개 문항), 절차적 정의(5개 문항), 분배적 정의(2개 문항), 경찰 효과성(7개 문항)을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성 요인으로 제안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을 단순한 설명변수로 한정하지 않고, 경찰 정당성 인식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경찰 정당성 인식을 다차원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전술한 Tankebe, Reisig & Wang(2016)과 Sun et al.(2018)의 연구는 경찰 정당성 인식이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효과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각 요인이 시민의 법준수 의무와 경찰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경찰 정당성 연구에서 이 네 가지 요인의 이론적·경험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였다.

경찰 정당성 인식의 다차원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합법성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경찰의 권한 행사가 시민의 자발적 권위 수용과 명령준수를 이끄는 요인으로, 경찰이 합법적 규칙·정책·법률을 집행하고 이를 시민에게 명확히 보여줄 때 강화된다(Mazerolle et al., 2013). 절차적 정의는 경찰활동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시민의 인식으로, 시민이 존중받고 의견이 경청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경찰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완화한다(Tyler, 1990; Cherney & Murphy, 2013). 분배적 공정성은 치안 서비스와 법집행의 결과가 집단·개인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할 때 경찰에 대한 권한 부여 의지가 높아진다(Roemer, 1996; Sunshine & Tyler, 2003). 마지막으로 경찰 효과성은 범죄 억제, 사회질서 유지, 신속 대응 등 경찰의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의미하며, 강력한 권한과 능력 인식은 법준수와 순응을 촉진한다(Skogan & Frydl, 2004; Gau, 2011).

3. 선행연구

Tankebe(2013)로부터 시작된 경찰 정당성 인식의 다차원적 구성 요인 모델을 활용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박시영·최응렬(2022)은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경찰 효과성이 법준수 의무감을 매개하여 경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Tyler 모형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 이론의 양적연구가 수행되어 온 가운데, Tankebe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경로분석을 중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인을 각각의 독립 변수처럼 활용하였을 뿐,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소영·정보성(2022)은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경찰 효과성이 경찰 정당성 인식을 매개하여 범죄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Sunshine & Tyler(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행한 이 연구에서는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경찰 효과성을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성 요인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합법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절차적 정의를 규범적 모델(procedure-based instrumental model), 분배적 정의와 경찰 효과성을 도구적 모델(performance-based instrumental model)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김소영·엄유진·정재훈(2024)은 Tankebe(2013)가 제시한 경찰 정당성 인식의 다차원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Tankebe(2013)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도구적 성격을 띠는 경찰 효과성을 제외하고, 규범적 성격을 띠는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로 구성된 3 요인 모델이 더 적절한 모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Tyler 모델에서도 경찰 효과성은 도구적인 성격으로 구분되는바, 이 연구는 규범적 요인과 도구적 요인이 실제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Tankebe(2013) 모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한계, 즉 합법성과 분배적 공정성이 두 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¹⁾.

1) Zwick & Velicer(1986)와 MacCallum et al.(1999)에 따르면, 단일 요인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인이 최소 세 개 이상의 문항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할 때 요인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표 1〉 국내 연구 현황

구분		측정문항
박시영 · 최응렬 (2022)	합법성	경찰이 시민들을 상대할 때 법을 준수한다.
		법은 일반 시민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
	절차적 공정성	경찰은 시민을 상대할 때 적절한 절차를 준수한다.
		경찰은 경찰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명백한 이유를 밝힌다.
		경찰은 사적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경찰은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기회를 제공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당신을 존중한다.
	분배적 공정성	경찰은 시민들에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시민들은 경찰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얻는다.
	경찰 효과성	경찰이 사이버범죄에 잘 대처하고 있다.
		경찰이 경제범죄에 잘 대처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잘 대응하고 있다.
		경찰이 주취자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
		경찰이 살인범죄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
김소영 · 정보성 (2022)	합법성	-
	절차적 공정성	경찰은 시민들을 존중으로 대한다.
		경찰은 시민들의 말을 경청한다.
		경찰은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경찰들은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경찰들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관용으로 대한다.
		경찰은 모든 시민들을 존중으로 대한다.
		경찰은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행한다.
	분배적 공정성	경찰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은 모든 시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한다.
		경찰은 법에 따라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찰 효과성	경찰은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재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에 신속하게 출동한다.
		경찰은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
		경찰은 시민의 도움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에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구분		측정문항
김소영·엄유진·정재훈 (2024)	합법성	시민들을 상대할 때 경찰은 법을 준수한다.
		법은 일반 시민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
	절차적 공정성	경찰은 적법한 절차와 법대로 행동하며 모두에게 공정하다.
		경찰은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경찰은 사적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당신을 존중한다.
		경찰은 경찰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유를 밝힌다.
	분배적 공정성	경찰은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시민들은 경찰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얻는다.
	경찰 효과성	경찰이 사이버 범죄에 잘 대처하고 있다.
		경찰이 경제 범죄에 잘 대처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및 난폭 운전에 잘 대응하고 있다.
		경찰이 주취자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
		경찰이 살인 범죄에 잘 대처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Tankebe(2013)의 다차원적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성 요인을 김소영·엄유진·정재훈(2024)이 국내 상황에 맞게 분석하여 제시한 3 요인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재훈(2021)이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두잇서베이’에 의뢰하여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녀 510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이 자료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반영한 할당표집을 적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울시가 설정한 5개 생활권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과도한 표본 편중을 방지하였다. 또한,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무응답 상태에서는 다음 문항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설계하였기에 최종 분석에 활용된 510명의 응답 자료에서 결측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측정도구

연구 수행을 위해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의 측정도구로 Tankebe(2013)의 모델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Tankebe, Reisig & Wang(2016)이 제시한 다차원 경찰 정당성 모델의 측정문항을 수정·번안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합법성 세 개 문항, 절차적 정의 일곱 개 문항, 분배적 정의 세 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차적 정의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존중(respect)’하는지와 ‘존엄(dignity)’으로 대하는지를 묻는 각각의 문항은 한국어로 번안했을 때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존엄과 관련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여섯 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값이 클수록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경찰 정당성 인식의 3 요인 모델 측정문항

구분	문항
합법성	1. 경찰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법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경찰의 가치관이 귀하의 가치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경찰이 귀하의 도덕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적 정의	1. 경찰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경찰은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경찰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경찰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경찰은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경찰에 의해 잘 보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배적 정의	1. 경찰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경찰관은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일관성 있게 법을 적용하여 집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경찰관은 사람들이 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받도록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7과 Amos v20.0.0을 활용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대표성을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3 요인 모델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렬분석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마지막으로 수렴 타당도 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256명(50.2%), 여성 254명(49.8%)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응답자 범위는 20세부터 66세로 전체 평균은 39.9세였으며, 20대 128명(25.1%), 30대 129명(25.3%), 40대 126명(24.7%), 50대 이상 127명(24.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인상태는 미혼 253명(49.6%), 기혼 257명(50.4%)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53명(10.4%), 전문대 74명(14.5%), 대학 341명(66.9%), 대학원 42명(8.2%)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의 경우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룬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 대학 졸업(재학, 휴학 포함)이 과표집 되었으나, 한국의 학력별 인구분포 통계에서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2023년 기준 약 55%인 것으로 나타나(지표누리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5. 8. 1.) 분석 활용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성별	남성	256	50.2	-
	여성	254	49.8	
연령대	20대	128	25.1	39.9세
	30대	129	25.3	
	40대	126	24.7	
	50대 이상	127	24.9	
혼인상태	미혼	253	49.6	-
	기혼	257	50.4	
학력	고졸 이하	53	10.4	-
	전문대	74	14.5	
	대학	341	66.9	
	대학원	42	8.2	

2. 탐색적 요인분석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χ^2)을 확인하였다. KMO 지수는 .7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며, Bartlett 검정은 상관행렬이 단위행렬과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야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김렬 외, 2008). 분석 결과, KMO 지수는 .949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3,799.349($p < .001$)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다음 요인추출과 관련하여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추출은 선행연구에 따라 3 요인 구조를 택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요인적재량은 .6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중적재 기준은 .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3 요인 구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 1의 고유값은 2.930(24.419%), 요인 2는 2.850(23.751%), 요인 3은 2.750(22.915%)로 나타나 총 71.08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합법성은 요인 2에 적재되고, 분배적 정의는 요인 1에 적재

되었다. 절차적 정의 대부분의 문항은 요인적재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중적재가 나타나 q7, q9 두 개의 문항만이 요인 3에 적재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두 개 문항만을 활용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절차적 정의는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선행연구에 따라 이론적으로 설정한 경찰 정당성 인식의 3 요인 구조가 실증적으로는 지지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4〉 3 요인 모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합법성	q1	.353	.756	.172
	q2	.210	.792	.285
	q3	.226	.771	.345
절차적 정의	q4	.656	.506	.215
	q5	.393	.464	.562
	q6	.425	.463	.570
	q7	.353(.341)	.285(.438)	.689(.572)
	q8	.410	.206	.597
	q9	.162(.221)	.217(.233)	.806(.894)
분배적 정의	q10	.771	.222	.280
	q11	.787	.262	.296
	q12	.642	.286	.432
고유값(eigen-value)		2.930	2.850	2.750
분산(%)		24.419	23.751	22.915
누적분산(%)		24.419	48.170	71.085

※ 괄호는 두 개 문항만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임

경찰 정당성 인식의 3 요인 모델의 실증적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Horn(1965)이 제안한 병렬분석(parallel analysis)을 하였다. 병렬분석은 무작위로 생성된 데이터의 평균 고유값과 실제 데이터의 고유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O'Connor(2000)가 제작한 SPSS 매크로를 활용하여 1,000회 무작위 데이터 실행을 통한 평균 고유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으며, 이를 통해 1개의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의의 문항이 이중적재되거나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해주는 결과이다.

〈표 5〉 병렬분석 결과(분석 대상: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문항 12개)

요인	실제 고유값	무작위 평균 고유값*	보존 여부	분산 비율(%)	누적 비율(%)
1	7.020	1.255	○	58.496	58.496
2	.820	1.191	—	6.836	65.332
3	.690	1.138	—	5.753	71.085
4	.591	1.094	—	4.921	76.007
5	.521	1.053	—	4.344	80.350
6	.460	1.016	—	3.836	84.186
7	.430	.981	—	3.583	87.769
8	.380	.947	—	3.166	90.935
9	.350	.914	—	2.916	93.851
10	.320	.881	—	2.666	96.517
11	.300	.849	—	2.500	99.017
12	.120	.817	—	.983	100.000

* 동일 표본 수(N=510) 및 변수 수(p=12)를 기준으로 무작위 데이터를 1,000회 생성하여 산출한 평균 고유값임.

병렬분석 결과에 따라 요인 수를 1로 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문항이 .677 이상의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였으며, 공통성도 모두 .459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량 설명력은 약 58.496%로 양호하였으며, KMO 지수는 .94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chi^2=3,799.349$, $p<.001$ 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가 실증적으로 하나의 포괄적인 규범적 판단(normative judgments) 요인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표 6〉 1 요인 모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적재량	공통성
합법성	q1	.739	.547
	q2	.740	.547
	q3	.771	.594
절차적 정의	q4	.800	.640
	q5	.817	.668
	q6	.840	.706
	q7	.763	.582
	q8	.699	.489
	q9	.677	.459
분배적 정의	q10	.742	.551
	q11	.784	.614
	q12	.789	.622
고유값(eigen-value)		7.020	
KMO		.949	
Bartlett(x ²)		3799.349***	

***p<.001

3. 신뢰도 분석

앞선 분석을 통해 도출된 1 요인 모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수정된 항목 - 전체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3 미만으로 나타날 때 해당 문항을 기각하고 있다(Green & Salkind, 2003). 분석 결과, 가장 낮은 문항의 값이 .618로 나타나 신뢰도가 저해되는 문항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6 이상일 때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한다(채서일, 2003). 전체 Cronbach's α 값은 .935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정 문항을 삭제했을 때 α 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해당 문항이 척도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α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문항이 척도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문항이 각각 삭제되었을 때 α 값이 감소하므로, 결국 모든 문항은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수정된 항목 -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Cronbach's α
합법성	q1	.686	.931	.935
	q2	.686	.931	
	q3	.720	.929	
절차적 정의	q4	.753	.928	
	q5	.770	.927	
	q6	.798	.926	
	q7	.711	.930	
	q8	.642	.932	
	q9	.618	.933	
분배적 정의	q10	.689	.930	
	q11	.734	.929	
	q12	.741	.928	

4. 확인적 요인분석

새롭게 도출된 경찰 정당성 인식의 1 요인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314.447^{***}$ ($df=54$, $p<.001$)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NFI=.918$, $RFI=.900$, $IFI=.931$, $TLI=.916$, $CFI=.931$,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는 .097인 것으로 드러났다. Tucker & Lewis(1973), Bentler(1990)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을 의미하고, .9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Browne & Cudeck(1993)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의 값이 .05 미만이면 모형 적합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08 이하면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10 이하면 모형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그리고 .10을 초과하면 모형 적합도가 나쁜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면 모형 적합도가 우수하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를 고려하면 모형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RMSEA는 자유도, 표본 크기, 변수 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단일 지수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Taasoobshirazi & Wang, 2016; Shi, Lee & Maydeu-Olivares, 2019; Stone, 2021) 역시 이러한 이유로 단일 지수의 판단 기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 지수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RMSEA와 함께 CFI, TLI 등 다른 적합도 지수를 병행하여 해석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RMSEA 외에도 CFI(.931), TLI(.916), NFI(.918) 등이 모두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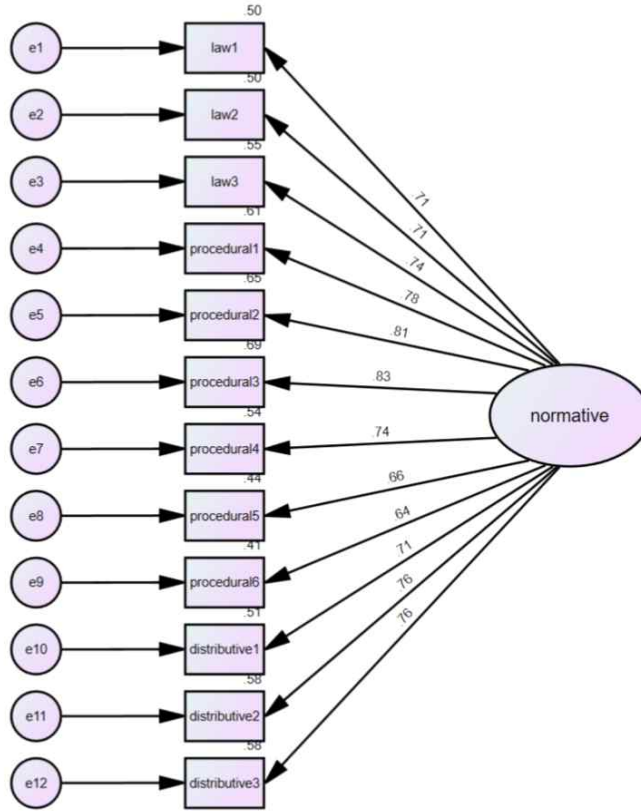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χ^2	df	NFI	R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314.447***	54	.918	.900	.931	.916	.931	.097
수용기준	p>.05	—	.9 이상					.1 이하

***p<.001

경찰 정당성 인식의 1 요인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문항별 표준화된 요인계수 추정치를 [그림 1]과 같이 확인하였다. 이때, 모든 표준화된 요인계수 값은 .64에서 .83 사이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즉, 경찰 정당성 인식의 1 요인 모델의 모든 측정문항은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마지막으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문항 간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수렴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단일 척도 내 각 항목의 표준화추정치와 오차계수를 활용하여 산출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통해 확인하며, 일반적으로 CR 값은 .7 이상, AVE 값은 .5 이상이면 수렴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Anderson & Gerbing, 1988). 분석 결과, 경찰 정당성 인식의 1 요인 모델의 CR 값은 0.935, AVE 값은 0.548로 나타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연구의 측정모형이 높은 수준의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V. 결 론

이 연구는 최근 경찰활동과 치안정책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찰 정당성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활동 및 정책 설계에 유용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Tankebe(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경찰 정당성 인식의 3 요인 모델로 제시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제 2020년 성인 인 서울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이론적으로 제시된 요인 구조가 실제 응답자의 인식 속에서 동일하게 재현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경찰 정당성 인식 연구의 개념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경찰활동의 정당성은 시민의 자발적 법준수와 협력을 유도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 요인의 타당성 검증은 학술적·실무적으로 모두 필수적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렬분석 결과 실제 데이터의 고유값이 무작위 데이터의 평균 고유값을 초과하는 요인은 1개로 나타나,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 요인 구조가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1 요인 구조를 전제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동일 요인에 유의하게 적재되어 단일 요인 구성의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0.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 적합도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념 신뢰도(CR) 값과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산출한 결과, CR은 0.935, AVE는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 역시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쟁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경찰 정당성 인식이 단일 요인 구조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이지만, 반드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전술한 김소영·엄유진·정재훈(2024)의 연구뿐 아니라, 네덜란드 피해자 패널 자료를 분석한 Koster(2017)는 경찰 대응의 성과(performance)와 절차적 정의가 경험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 요인으로 결합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²⁾. 또한, Sun et al.(2018)은 중국 자료를 분석하면서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효과성을

2) 여기서 성과(performance)는 Tankebe(2013)가 제시한 '경찰 효과성(effectiveness)'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도구적 차원에 해당하므로, 이 연구의 논의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모두 경찰 정당성이라는 단일 상위구성(2차 요인)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념적·방법론적 쟁점을 동반한다. Jackson & Bradford(2019)는 경찰 정당성 인식의 다차원적 요인을 단일 요인으로 응집하는 접근이 개념적 모호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 연구 역시 이러한 해석상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론적 구분과 경험적 수렴 사이의 간극을 정밀하게 확인하거나, 혹은 자기보고식 응답의 특성상 항목 간 미세한 차이가 응답 과정에서 통합 판단으로 수렴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 정당성 인식의 단일 요인 구조라는 결과는 반복·검증이 필요한 한계를 가지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 권위주의 시기의 정치지향적·중앙집권적 경찰 운영 경험은 시민이 경찰을 단일한 권위체로 지각하도록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합법성·절차적 정의·분배적 정의·효과성의 세부 차원을 총체적 신뢰/불신 판단으로 응축하는 인식 경향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 나아가 민주화 이후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주민밀착형 서비스의 확산, 자치경찰제의 정착은 시민에게 다양한 규범·성과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했지만, 실제 인식 차원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라는 통합된 판단으로 수렴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공공담론과 미디어·교육에서 경찰 신뢰/불신의 이분법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함에 따라, 자기보고식 응답에서 차원 간 높은 상관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단일 요인으로 귀결되는 수렴이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해석은 경찰과 시민 관계의 역사·정치·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 논의의 취지와 부합한다. 이를테면 Tankebe(2009)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가 국가별 역사·정치·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므로 절차적 정의 이론의 적용 또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Bradford et al.(2015) 역시 절차적 정의 연구에서 사회적 정체성 등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일한 이론틀 아래서도 국가별·시기별 맥락에 따라 정당성의 차원 구조가 응집 혹은 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 정당성 인식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단일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Tyler(1990)와 Tankebe(2009)의 논의와도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한다. 두 학자는 시민의 법준수와 협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경찰 효과성과 같은 도구적 관점(instrumental views)보다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등 규범적 판단(normative judgements)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확인된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가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수렴한 것은 이들을 규범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은 경찰활동을 평가할 때 다양한 차원을 구분하기

보다는 규범적 판단을 중심으로 통합된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단일 요인 구조 결과 역시 이러한 규범적 판단의 우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정당성 인식을 구성하는 규범적 요인이 단일 구조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개별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종합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절차적 정의 및 공정성 강화 모듈, 시민 응대 매뉴얼, 서비스 결과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결합한 맞춤형 직무훈련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활동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범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시민들이 경찰활동의 이유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설명·경청·피드백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치안서비스의 결과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계층·지역별 치안격차를 줄이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범죄 발생 패턴, 치안 수요, 경찰 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차별화된 자원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규범적 요인이 단일 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심층면접(FGI)이나 개별심층면접(IDI)과 같은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시민들이 경찰 정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통합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탐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규범적 측면의 경찰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협력 의지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대상이 특정 시점과 지역의 표본에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아주 우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기존 문항 구성이 갖는 구조적 제약일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측정 문항 개발과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모형 적합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 정당성 인식의 구조가 국가별·문화권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반복 검증과 비교 연구를 통해 절차적 정의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창국. (2013). “범죄신고 의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자 문제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총」, 28(2): 1-15.
- 김군태. (2017). 「지역주민의 범죄신고 의사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렬·성도경·이환범·이수창. (2008). 「사회과학 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한 통계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대명.
- 김소영·엄유진·정재훈. (2024). “경찰 정당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2): 57-84.
- 김소영·정보성. (2022). “시민의 범죄신고의사에 대한 경찰정당성 이론의 검증-도구적 모델과 규범적 모델의 비교 연구”. 「한국경찰연구」, 21(4): 3-30.
- 라광현. (2018). “범죄의사결정과 법집행 전략”. 「형사정책연구」, 27(2): 1-23.
- 박시영·최응렬. (2022). “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6): 139-160.
- 서한별·황의갑. (2019). “범죄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조치 및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3(2): 91-110.
- 이영섭. (2017). “경찰 정당성 이론에 대한 분석”. 「경찰학연구」, 17(4): 95-125.
- 이재영·이승현. (2022). “경찰관의 절차적 정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3): 261-286.
- 장재성. (2023). “절차적 정의 이론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25(4): 87-112.
- 정재훈. (2021). 「경찰활동의 절차적 정의와 시민의 신고 의사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채서일. (2003). 「사회과학조사방법론(3rd ed.)」. 파주: 학현사.
- Anderson, J. C., and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eetham, D. (1991). The legitimation of Power. Buffalo, NY: Prometheus Books.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246.

- Black, D. (2010). *The behavior of law*(Special ed.). Bingley, West Yorkshire: Emerald Group Publishing.
- Bradford, B., Hohl, K., Jackson, J., & MacQueen, S. (2015). "Obeying the rules of the road: Procedur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normative complianc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31(2): 171-191.
- Browne, M. W., and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erney, A., and Murphy, K. (2013). "Policing terrorism with procedural justice: The role of police legitimacy and law legitimacy,"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6(3): 403-421.
- Fornell, C., and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u, J. M. (2011).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procedural justice and police legitimacy: An empirical test of core theoretical proposi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6): 489-498.
- Green, S. B., and Salkind, N. J.(2003). *Using SPSS for Windows and Macintosh: Analyzing and understanding data*. NJ: Pearson Prentice Hall.
- Hinsch, W. (2008). "Legitimacy and Justice," In J. Kuhnelt (Ed.), *Political Legitimization without Morality* (pp. 15-32). London: Springer.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2): 179-185.
- Jackson, J., Bradford, B., Hough, M., Myhill, A., Quinton, P., and Tyler, T. R. (2012). "Why do people comply with the law? Legitimacy and the influence of legal institution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2(6): 1051-1071.
- Jackson, J., and Bradford, B. (2019).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empirical and normative legitimacy? A methodological commentary on 'police legitimacy and citizen cooperation in China'"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14(4): 265-289.
- Koster, N. S. N. (2017). "Victims' perceptions of the police response as a predictor of victim cooperation in the Netherlands: A prospective analysis." 「*Psychology*,

- crime & law」 23(3): 201-220.
- Liu, J. (2019). "Debating Core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About Police Legitimacy—Editor's Introduction,"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14(4), 261-263.
-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and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99.
- Mazerolle, L., Bennett, S., Davis, J., Sargeant, E., and Manning, M. (2013). "Legitimacy in policing: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9(1): 1-146.
- O'Conno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2(3): 396-402.
- Peacock, R. P. (2018). Applying Tyler's Process-based Model of Legitimacy in a Developing Country.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Reisig, M. D., Bratton, J., and Gertz, M. G. (2007).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finement of process-based policing measur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8): 1005-1028.
- Roemer, J. E. (1996).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i, D., Lee, T., and Maydeu-Olivares, A. (2019). "Understanding the model size effect on SEM fit indic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9(2): 310-334.
- Skogan, W. G., and Frydl, K. (2004).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The evidenc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Stone, B. M. (2021). "The ethical use of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commendations for psychologists," 「Frontiers in psychology」 12: 783226.
- Sun, I. Y., Li, L., Wu, Y., and Hu, R. (2018). "Police legitimacy and citizen cooperation in China: testing an alternative model,"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13: 275-291.
- Sunshine, J., and Tyler, T. 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37(3): 513-548.
- Taasobshirazi, G., and Wang, S. (2016). "The performance of the SRMR, RMSEA, CFI, and TLI: An examination of sample size, path size, and degrees of freedom."

- 「Journal of Applied Quantitative Methods」 11(3): 31-39.
- Tankebe, J. (2009).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Criminology」 47(4): 1265-1293.
- Tankebe, J. (2013). "Viewing things differently: The dimensions of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Criminology」 51(1): 103-135.
- Tankebe, J., Reisig, M. D., and Wang, X. (2016). "A multidimensional model of police legitimacy: A cross-cultural assessment," 「Law and human behavior」 40(1): 11-22.
- Tucker, L. R., and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 - 10.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Tyler, T. R. (2003).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30: 283-357.
- Tyler, T. R. (2006).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375-400.
- Tyler, T. R., and Jackson, J. (2014). "Popular legitimacy and the exercise of legal authority: Motivating compliance, cooperation, and engagement,"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1): 78-95.
- Zwick, W. R., and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3): 432-442.
- 지표누리 e-나라지표 홈페이지,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검색일자 2025. 8. 1.
-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범죄의 수사단서」, 검색일자 2025. 7. 8.

Abstract

Validating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Perceived Police Legitimacy

Jaehoon Jung*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the three-factor model of perceived police legitimacy proposed by Kim, Eom, and Jung (2024) in South Korea, which was adapted from Tankebe's (2013) original four-factor structure.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510 adult residents of Seoul in October 2020, the study conducted a series of validity analyse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 three-factor model—comprising lawfulness,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was not suitable. Parallel analysis indicated that a single-factor structure was more appropriate, and subsequ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at all items loaded significantly onto a single factor. Reliability testing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urther demonstrated strong construct valid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awfulness,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are not perceived as independent dimensions, but rather as components of an integrated normative construct. Therefore, enhancing police legitimacy may be more effective when normative elements are addressed holistically rather than in isolation. This study hold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validity of a normative single-factor structure of perceived police legitimacy, and it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research through sample diversification and repeated valid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Legitimacy, Lawfulness, Procedur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Factor Analysi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nd Security in Gangwon State University

논문 접수일 : 2025년 8월 15일

심사 완료일 : 2025년 9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9월 12일

